

KREI, ‘농지임대차 시장분석과 개선과제’ 통해 밝혀

농지 임대차 시장 줄고 대농 집중

우리나라 농지임대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임대농지가 일부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최근 발간한 ‘농지임대차 시장 분석과 개선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농지임대차 시장의 구조와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진이 국가데이터처의 농지임대차조사와 농림어업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농지임대차면적은 2013년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임대농지의 규모도 농가 집중도는 높아졌다.

임차면적 지니계수는 2000년 0.54에서 2020년 0.66으로 상승했다. 특히 10ha 이상 농가가 전체 임차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6%에서 25%로 크게

늘어 임대차 시장 내부의 집중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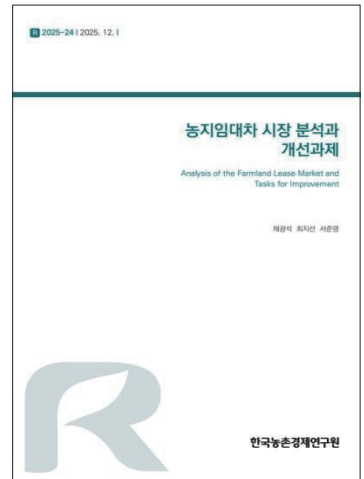
농지 임차 수요는 농업소득, 특히 쌀 소득이 높고 경영주 연령이 50대 이하인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채가 많은 농가 역시 농지를 직접 매입하기보다 임차를 통해 경영 규모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농지 임대 공급은 농외소득과 자산이 많고 농업소득이 낮은 고령농과 은퇴 준비농이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부채가 3억 원 이상인 농가는 부채 상환 부담으로 영농을 계속하는 ‘경영 고착’ 현상이 나타나 농지 임대 공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 임차 의향에는 경제적 수익성뿐 아니라 지역 내 정보 접근성, 임대인과의 신뢰관계, 계약의 안정성 등 사회적·제도적 요인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역 내

신뢰관계와 안정적인 계약에 대한 인식이 수익성에 대한 인식보다 임차 의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업정책이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주요 분석 대상이 됐다. 연구진은 계량분석을 통해 최근 농지임대차 시장의 급격한 축소에 2020년 소농 직불금 도입 등에 따른 소규모 농가의 자경 확대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

분석했다.

직불금 수령 등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자경이나 위탁영농이 늘어날 경우 임대차 시장에 공급되는 농지가 감소해 청년농과 신규 농업인, 경영 규모 확대를 원하는 전업농의 농지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진은 농지정책의 초점을 농지 소유와 형식적 자경에서 실제 농업 이용과 안정적인 임대차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채광석 KREI 연구위원은 “농지임대차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보다 실제 농업에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농과 신규 농업인이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 필요한 농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농협, 경영진 AI 실전교육…AX 리더십 강화

실무 중심 AI 교육으로 조직의 혁신 주도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3일 서울시 중구 본관에서 범농협 임원 및 집행간부를 대상으로 ‘경영진 AI 아카데미’ 1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최신 동향 ▲국내외 기업의 AI 활용 사례 ▲AI를 활용한 의사결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순한 기술 이해를 넘어 경영 현안과 실제 업무에 AI를 적용하는 실질적인 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농협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영진이 AI를 의사결정과 업무 혁신을 지원하는 파트너로 적극 활용하고, 조직의 AX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총 2차례에 걸쳐 진

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범농협 전반의 AI 활용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박서홍 부회장은 “AX 경쟁력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경영과 업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경영진부터 AI에 대한 이해와 활용 역량을 높여 조직의 변화를 이끌고, 이를 농업·농촌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tya0712@daum.net



▲경영진 AI 아카데미 1차 교육 실시 (농협 제공)

농진원, 새만금에 사료작물 종자처리 종합플랜트 조성



▲사료작물 종자처리 종합플랜트 조감도. 농진원 제공

458억원 투입…연간 3500톤 보급종 생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이석형·이하 농진원)이 새만금 농생명융지에 국내 최초의 사료작물 종자 전용 생산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농진원은 새만금 농생명융지에 ‘사료작물 종자처리 종합플랜트’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로, 설계비 7억3600만원이 반영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31년까지 총사업비 458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이다.

농진원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내 육성 우수 신품종의 종

자 생산·보급을 확대해 90%를 웃도는 사료작물 종자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생산기반 구축을 준비해왔다. 올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실시한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편익(B/C) 비율이 1.054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했다.

현재 농진원은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호밀, 트리키케일, 청보리, 귀리, 총채밀 등 사료맥류 종자를 생산해 전국에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종자 정선시설만으로는 단기간에 대량의 종자를 처리하기 어려운 현상 수

요에도 생산·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종자처리 종합플랜트는 새만금 농생명융지 제5공구 내 농촌진흥청 연구부지에 20ha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5ha에는 종자 정선·저장시설을, 15ha에는 원원종·원종 증식을 위한 포장을 구축할 예정이다.

농진원은 이곳에서 생산한 원종을 활용해 인근 새만금 지역에 약 1000ha 규모의 채종단지를 조성하고, 농업인 위탁생산을 통해 연간 3500톤의 사료작물 보급종을 생산·정선할 계획이다.

생산된 종자는 농식품부 고시인 ‘종자관리요강’에 따른 규격으로 선별해 우량종자로 전국에 공급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경축농가는 연간 31만5000톤의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산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사료작물 종자 수입량의 약 30%를 국내 육성 종자로 대체하고, 전국 200개소 이상의 채종도 운영을 통해 연간 약 75억원의 농가소득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수입 금지 식물 43톤, 조직적 불법 수입·유통 일당 적발

베트남산 생과실·열매채소류 6개월간 불법 수입·유통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베트남산 생과일과 열매채소류를 여행객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이 약 6개월간 불법 수입·유통한 물량은 구아바와 롱간, 람부탄, 생고추 등 약 43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욱)는 베트남산 금지품을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을 주조한 베트남인 1명과 베트남 귀화인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 이들은 수입·도매·소매 등 역할을 나눠 금지품의 불법 수입과 유통을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책 A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 이른바 ‘포터’를 모집해 금지품을 여행용 가방이나 기내 수화물에 나눠 넣어 국내로 들여오게 했다.

국내에 반입된 금지품은 도매인 B에게 전달됐다.

도매인 B는 국내 판매를 위해 소매인 C 등 판매자를 모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금지품의 사진과 가격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소매인들은 이를 이용해 각자의 SNS에서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지품을 판매하고 B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역본부는 농산물 온라인 단속 과정에서 특정 금지품이 반복적으로 판매되는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내역 분석 등을 통해 불법 수입부터 국내 판매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유통 경로를 확인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베트남산 금지품을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것

으로 파악됐다. 불법 유통 물량은 구아바·롱간·람부탄 등 생과실과 생고추 등 열매채소류를 합쳐 약 4300kg에 이른다.

검역본부는 도매인 B와 소매인 C가 금지품을 국내에 유통했을 뿐 아니라 직접 불법 수입에도 가담한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입책 A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행객을 이용한 금지품 불법 수입 사례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금지품을 수입하거나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허위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불법 수입된 금지품이 국내 유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도 강화된다. 개정된 식물방역법이 오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면 불법 수입된 금지품의 국내 유통 과정에 관여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불법 수입된 금지품(베트남산 구아바, 롱간, 람부탄, 생고추 등)

도매시장 거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경매·입찰

품목별로 정해진 시간에 공개적·경쟁적 거래를 통하여 수급장정을 반영한 가격에 낙찰



정가매매·수의매매

출하자와 구매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조건(가격, 물량 등)을 기초로 도매시장법인(경매사)이 거래를 주관



전자거래(상·물 분리거래)

도매시장법인이 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면 물건을 산지에서 구매자로 직송



예약거래

도매시장법인과 상의하여 미리 예약거래 (3일, 7일, 한달, 시즌별 등)